

10기 전인대 이후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분석과 전망

신 상 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논문 요약 ◆

2002년 11월과 2003년 3월 중국은 최고지도부를 개편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해 나갈 대내외 정책방침을 확정·발표하였다. 장쩌민을 핵심으로 하는 3세대에서 후진타오를 비롯한 4세대로 중국의 지도부가 변화되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중국공산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16차 당대회와 10기 전인대에서 결정된 중국 신지도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분석·전망하였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당대회와 전인대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중국의 신지도부가 경제적 실리를 중시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안보전략은 보다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I. 들어가는 말

2002년 11월과 2003년 3월 중국은 중국공산당, 국무원, 인민해방군 및 전인대 지도부를 선출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해 나갈 대내외 정책방침을 확정·발표하였다. 16차 당대회와 10기 전인대를 계기로 장쩌민(江澤民)을 핵심으로 하는 3세대에서 후진타오(胡錦濤)를 비롯한 4세대로 중국의 지도부가 변화되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중국공산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전면적 소강사회'(全面的 小康社會) 실현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16차 당대회와 10기 전인대에서 장쩌민,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리루이환(李瑞環) 등이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핵심 요직에서 물러났다. 예외적으로 장쩌민은 중앙

군사위 주석직에 유임되었는데, 이는 아직 군부 내에 확고한 세력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강화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한 배려성 차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¹⁾ 2차례 이상의 연임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따라 장쩌민이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났으며, 국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치협상회의 주석 등도 15차 당대회 시에 합의된 70세 이상 간부의 퇴임에 대한 목계에 의해 현직에서 사임하였다.²⁾

이제 후진타오, 우방귀(吳邦國), 원자바오(溫家寶), 쩡칭홍(曾慶紅) 등이 중국의 대내외정책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후진타오는 당 서열 1위의 총서기와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으로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우방귀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서는 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 임면권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당 서열 2위로 부상하였다.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반을 집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쩡칭홍은 당내 서열이 5위이지만, 장쩌민 직계로서 장쩌민의 후원 하에 서기처의 상무서기로서 당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국가부주석으로서 후진타오를 견제할 유일한 지도자로 간주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법치화·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지도자 개인의 역할이 지대하다. 후진타오가 장쩌민의 그늘에서 벗어나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처럼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장쩌민이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보유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 자신의 지지자들을 통해 계속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이후에나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장쩌민이 언제 중앙군사위 주석직에서 물러날 것인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쩌민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향후 2년 정도는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외교안보정책에 계속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1) “江澤民掌權,利平穩過渡,” 『文匯報』, 2002. 11. 16.

2) 다만, 68세의 리루이환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난 것은 예외적 사건이었다. 그가 왜 물러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장쩌민 등 일부 지도자들이 전면 퇴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신도 퇴임할 것이니 연로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선해서 물러날 것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신지도부가 외교안보정책에 깊이 관여한 경험이 많지 않고 중국이 경제발전을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분간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를 비롯한 제4세대 지도부 하에서도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외교안보정책 목표를 둘 것이지만 장쩌민이 전면에 있을 때와는 상이한 주변환경과 대내여건 하에서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16차 당대회와 10기 전인대 이후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다소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 신지도부의 기본 인식과 정책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행동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16차 당대회와 10기 전인에서 결정된 중국 신지도부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북한에 대한 정책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국 신 지도부 구성과 대내정책 전망

1.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 출범

후진타오가 당 서열 1위의 총서기와 국가주석(전임 주석: 장쩌민)에 선출·유임되고 원자바오가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무원 총리(전임 총리: 주룽지)에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외견상으로 장쩌민-주룽지 체제에서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내 서열 2위와 4위인 우방귀와 자칭린(賈慶林)이 각각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선출되었으나,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국정치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16차 당대회와 10기 전인대 이후에도 실권은 여전히 250만 명의 인민해방군에 대해 지휘·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쩌민에게 있다. 16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은 자신의 ‘3개대표 중요사상’을 중국공산당 규약에

삽입하는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³⁾ 그리고 장쩌민은 9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우방귀, 쩡칭훙, 자칭린, 황쥐, 리장춘 등 5명의 지지자들을 발탁시키게 되어, 중국공산당의 핵심 정책결정과정에서 계속 작간접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장쩌민은 당 중앙군사위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에 유임되어 계속 군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과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처럼 막후에서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10기 전인대에서도 장쩌민은 일부 중국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계속 보유하게 됨으로써 군사안보문제를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⁴⁾

중국 신지도부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기존의 7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었다는 점은 특정 지도자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될 여지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쩌민(군)이 외교안보분야에서 최고 결정권을 유지하면서 후진타오(당·정), 쩡칭훙(당), 원자바오(정) 등이 권력을 분담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⁵⁾ 카리스마적 인물이 아닌 후진타오가 중국공산당의 영도핵심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쩡칭훙 등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할 것이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기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개혁·개방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해 온 기술관료들이며, 중국의 신지도부의 평균연령이 대폭 감소되었다. 356명의 당 중앙위원회 정·부위원 모두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공산당에 가입한 간부들이며, 중앙위원회에 진입한 지도자들의 평균연령이 55.4세로 젊어졌다. 국무원 비서장과 28개 국무원 부장의 평균연령도

3) 중국공산당 규약 전문은 『文匯報』, 2002. 11. 19에 실려 있다.

4) 장쩌민의 ‘불완전한 은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全聖興, “中國 16次 黨大會에 대한 序說的 評價,” 『新亞細亞』, 제10권 1호 (2003. 봄), pp. 7-9에 잘 정리되어 있다.

5) 江澤民은 16차 당대회 개최 직전 소집된 중앙군사위 회의 시 중앙군사위 주석 퇴임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군부의 유임 희망을 받아들여 유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江澤民曾辭任將領紛挽留,” 『文匯報』, 2003. 3. 16; “中共新班子分工穩然成形,” 『明報』, 2002. 11. 5.

58.7세로 감소되고, 쉬용웨이(許永躍) 국가안전부장을 제외한 모든 국무원 부장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여 중국 행정부 지도자들이 고학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 하에서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보다 민주화와 제도화의 방향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중대한 정책결정이 과학적·합리적 판단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⁶⁾ 그러나 중국의 신지도부는 대내 안정과 발전을 중시하여 행정효율 향상과 법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는 ‘사회주의 민주화’를 강조할 것이나, 정치체제 개혁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표 1> 중국정부 신 지도부 현황

| | |
|-------------|-------------------------|
| 국가주석 | 胡錦濤 |
| 국가부주석 | 曾慶紅 |
| 국무원총리 | 溫家寶 |
| 국무원 부총리 | 黃菊, 吳儀, 曾培炎, 回良玉 |
| 국무위원 | 周永康, 曹剛川, 唐家璇, 華建民, 陳至立 |
|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 江澤民 |
| 국가중앙군사위 부주석 | 胡錦濤, 郭伯雄, 曹剛川 |
| 국가중앙군사위원 | 徐才厚, 梁光烈, 廖錫龍, 李繼耐 |
| 전인대 상무위원장 | 吳邦國 |
| 정치협상회의 주석 | 賈慶林 |
| 외교부장 | 李肇星 |
| 국방부장 | 曹剛川 |

6) “溫家寶強調要建立科學民主決策機制,” <http://www.chinanews.com.cn/n/2003-03-04/26/278740.html>(검색일: 2003. 3. 5)

2. 대내정책: 안정·개혁·발전 도모

16차 당대회시 장쩌민의 정치보고와 전인대 폐막 당일 원자바오 총리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신지도부는 계속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 국정목표를 두고 있다.⁷⁾ 이를 위해 중국은 대외개방 조치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문제, 빈부격차, 농촌문제 및 국유기업 적자문제 해소를 당면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은 농촌개혁, 기업개혁, 금융개혁, 정부기구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⁸⁾ 중국의 지도자들은 농업, 농민, 농촌 등 소위 ‘3農問題’ 해결을 체제안정에 직결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농민에 대한 세수정책을 전환하고, 양곡 수매제도 개혁과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도 개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이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텐진의 농촌지역 출신으로서 농업담당 부총리를 역임하였다는 점도 중국이 농촌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 차원에서 중국은 국유자산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 현대적인 기업제도 도입노력을 적극화 할 것이다. 10기 전인대에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장관급 부서로 신설하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적자누적이 중국 내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불건전 여신비중을 심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중국은 금융기관의 영세성과 관리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 체제 강화 일환으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중국이 외국의 금융·보험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업계의 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0기 전인대에서 정부기구 개혁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조직체제 구축차원에서

7) 중국공산당은 16차 당대회 정치보고 제목을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개척해 나가자”로 결정하였다. 16차 당대회 정치보고 전문은 <http://www.fmprc.gov.cn/chn/37816.html>(검색일: 2002. 12. 28)에 게재되어 있다.

8) 『中國廣播網』, 2003. 3.1 8. 10:30-12:00 am.

공평하고 투명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정부와 기업의 분리, 권한 하방, 행정체제 효율제고 등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관리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과거 대외무역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국내무역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담당하였는데 이번 기구개편으로 두 기구가 상무부로 통합되어 대외무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경제침체 국면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03년도 경제성장율을 7%대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국유기업 개혁과 농촌주민의 도시유입으로 인하여 증가되고 있는 도시 실업율을 4.5% 이내로 통제함으로써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⁹⁾ 후진타오 지도부는 실업자 대책 차원에서 재취업과 새로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중국의 대만정책 전망

1. 교류·협력 확대정책 지속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는 실업문제와 빈부격차 해소 등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고, 장쩌민이 대만공작영도소조 조장으로서 대만정책 결정과정에 핵심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대만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신 지도부는 집권 초기에 안정적 대외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과 대화를 강조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대만의 협력이 필요하다. 서부대개발과 ‘南水北調’(양자강지역의 물줄기를 동북부지역으로 역류시킴)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중국은 대만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현재 대만은 홍콩과 미국에 이어 중국의 3대 자본투자 유치국이다. 현재 수십만 명의 대

9) 중국의 도시 실업율이 2000년 3.1%, 2001년 3.6%, 2002년 4%로 점차 악화되어 고용창출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만주민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대만자본은 중국 동남부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¹⁰⁾

중국은 ‘평화통일,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정책을 견지하면서 대만과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에 대한 대만의 의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 대만정부가 대만 주민들로부터 중국과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11월간 중국-대만 교역총액이 40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대만의 대중 협의투자 규모는 60억 달러에 달하였다. 1999년 대만의 총 교역에서 대중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이르렀으며, 홍콩을 포함할 경우 대만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23%에 달하였다.¹¹⁾

그러나 대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대만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996년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戒急用忍’(서두르지 않고 인내한다)정책을 채택하였다.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 통치하에서도 대만은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직접 ‘3통’(통상, 통항, 통우) 실현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적으로 대만통일을 촉진하고자 할 것이다. 2001년 1월 최초로 대만의 금문도, 마조도와 중국 복건성의 하문과 복주 간 ‘소3통’이 이루어졌으나, 대만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대만섬과 중국 간 직접 ‘3통’에는 반대하고 있다.¹²⁾ 중국은 “중국과 대만 모두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대만에게 본격적인 ‘3통’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2003년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간 ‘汪辜會談’이 개최된지 1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중국은

10) Richard Bush, “Cross-Strait Relations: A Time For Careful Management,” <http://www.brookings.org/fp/cnaps/papers/survey03.htm>(검색일: 2003. 5. 2), pp. 61-62.

11) 吳獻斌, “兩岸經貿關係的發展與趨勢,” 『當代亞太』, 2003年 第1期 (2003. 1), pp. 38-42; “16大後兩岸關係走勢,” 『瞭望』, 2003年 第2期 (2003. 1), p. 47.

12) 黃佳, “兩岸加入WTO後的三通前景分析,” 『中國政治』, 2002年 第12期 (2002. 12), pp. 89-93.

양안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양안 간 최초의 반관반민 성격의 ‘왕고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제2차 ‘왕고회담’은 1995년 리덩후이(李登輝) 대만총통의 미국방문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왕고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1992년 해협회와 해기회간에 구두 형식으로 합의된 ‘하나의 중국원칙’을 대만이 수용해야 하나, 대만정부가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2차 ‘왕고회담’이 개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 대만독립 저지

후진타오 총서기가 전인대 회의에서 ‘대만공작 4개 원칙’을 밝히면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는데 대만정책의 핵심 목표를 둘 것이다. 중국은 대만 민진당 정부 하에서 대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양안간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는 집권 초기 대만과의 관계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위협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귀리핑(郭立峰) 동해함대 소장은 전인대 기간 중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를 중단하면 중국은 대만해협 지역에 배치된 미사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¹³⁾ 장쩌민 중앙군사위 주석도 2002년 10월 25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첨단 군사무기 판매중단을 약속할 경우 중국은 대만해협 인근에 배치된 미사일을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¹⁴⁾

그러나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거나 두개의 중국을 기도할 경우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2004년 3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에서 대만독립 주장이 강화될 우려가 있는데,¹⁵⁾ 중국 신지도부는 차기 대만 총

13) “美停對台軍售可撤飛彈,” 『文匯報』, 2003. 3. 12.

14) John Pomfret, “China Suggests Missile Buildup Linked to Arms Sales to Taiwan,” *Washington Post*, December 10, 2002, p. A01.

통선거에서 국민당의 쑨전(連戰)과 친민당의 송추위(宋楚瑜)가 총통과 부총통으로 출마하여 민진당 후보에 맞서기를 바라고 있다. 2000년 선거 때와 같이 국민당과 친민당이 독자후보를 낼 경우 대만독립 지향적인 민진당에 필패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간접적으로 중국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을 후원하고 대만독립을 당 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민진당에게는 배타적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자·지원정책이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정치대화를 거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대만과 미국간 군사관계 강화를 강력하게 견제할 것이다. 1979년 미·대만간 외교관계 단절 이후 최초로 2002년 3월 탕야오밍(湯耀明) 대만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군수회담에 참가한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만의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가입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만간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⁶⁾

중국의 대만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앙 대만공작 영도소조, 대만공작 판공실,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총참모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가 중국의 대만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장쩌민이 중앙 대만공작 영도소조 조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부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멤버에는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콩과 마카오가 정치·사회적 안정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대만문제를 ‘일국양제’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15)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에 선출된 3월 15일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은 국호를 「臺灣」으로 개칭하고, 신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閻學通, “全區導彈防禦系統與東北亞安全,” 『中國評論』, 2000年 6月號 (2000. 6), pp. 90-91; 韓輝, “美國發展部署反導武器的意圖與影響,” 『瞭望』, 2000年 第25期 (2000. 6), p. 56.

IV.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1. 중국 신 지도부의 국제질서 인식

중국 신지도부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은 16차 당대회 정치보고와 10기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중 ‘국제정세와 대외공작’ 부분에 잘 기술되어 있다. 중국은 평화와 발전이 현 국제사회의 양대 주제이며,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경제의 세계화 추세가 진전됨으로써 국제질서가 대체적으로 중국의 발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공격 등 미국의 패권정책이 강화되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9·11 테러사태 이후 대미관계가 개선되었으나, 미국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들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인도와 파키스탄과도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 대중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⁸⁾ 미국이 이라크를 군사 공격하여 지배하려는 이유는 중동지역을 장악하여 미국주도의 패권체제를 공고히 하고, 중동지역의 석유이권을 확보하려는데 있다고 간주한다.¹⁹⁾ 국제테러와 범죄, 마약 등 새로운 형태의 분쟁요인이 분출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남북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국제질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평가한다. 아·태지역의 핵심 불안정요인으로 인도-파키스탄 분쟁, 아프가니스탄문제, 한반도문제 그리고 대만의 독립움직임을 지목하고 있다.²⁰⁾

17) 江澤民, “江澤民同志在黨的十六大上所作報告全文,” <http://www.fmprc.gov.cn/chn/37816.html>(검색일:2002. 12. 28)

18) 江凌飛, “‘9·11’ 反思: 當前國際戰略形勢與中國安全環境,” 『國際經濟評論』, 2002年 9-10月號(2002.10), pp. 42-44; 林利民, “國際地緣戰略形勢與中國的選擇,” 『現代國際關係』, 2002年 第3期(2002.3), pp. 26-31.

19) 張達基, “反恐未結束, 動蕩持續: 美國攻伊之國際形勢分析,” 『中國評論』, 2002年 11月號 (2002. 11), pp. 22-24; 黃培昭, “戰爭深刻影向中東地區格局,” 『人民日報』, 2003. 3. 26; 王如君, “審視布什政府的中東政策,” 『人民日報』, 2003. 3. 25.

20) 國務院新聞辦公室, “2002年中國的國防,” 『新華月報』, 2003年 第1期(2003. 1), pp. 132-133; 王緝思, “對我國國際環境和美國戰略走向的幾點估計,” 『現代國際關係』,

또한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실리주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상하이협력기구』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중·러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위축되고 있는 점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이 러시아와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4개국과 『상하이협력기구』를 창설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에 의한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상하이협력기구』의 결속력 약화와 러시아의 외교노선 변화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²¹⁾

아울러 중국은 일본이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대테러 지원 명분 아래 자위대 함정을 인도양에까지 진출시키는 등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사실도 중국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기조

중국외교는 ‘全面的 小康社會’ 실현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목적을 두고 이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즉, 1980년대 이래 줄곧 중국이 견지해 온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계속 부여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과 교류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계속 대내 경제발전을 핵심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중요시할 것이다.

중국 신 지도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박람회의

2002年 第11期 (2002. 11), pp. 1-3.

21) 夏義善, “團結結碩果, 攜手創未來,” 『人民日報』, 2001.6.18; Bates Gill, “Shanghai Five: An Attempt to Counter US Influence in Asia?” <http://www.brook.edu/views/op-ed/gill/20010504.html>(검색일:2001. 6. 15)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외 평화 이미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는 중국이 세계 6대 경제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취임하였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질서의 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반테러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질서의 민주화와 다극화를 주장하면서 유엔 등 다자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행태에 반대하면서 「상하이협력기구」를 결성하고 「아세안지역포럼」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자 외교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미국이 이라크 전을 치루는 도중에도 이라크문제가 유엔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던 것도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다.

군사안보와 관련, 중국은 테러와 지진 등 돌발사건 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첨단화현대화 할 것이다. 김태호도 중국 군 지도부의 상당수가 전문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한 야전 사령관 출신으로 군 현대화 직업군인화 전문화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²⁾ 10기 전인대에서 통과된 2003년도 정부예산 안에서 국방예산을 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1,853억 인민폐(약 220억 달러)를 책정하였다. 1990년대 이래 처음으로 국방예산을 한자리 수 증액하는데 그쳤지만, 실제 국방비는 이 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될 것이다. 최소 400억 달러 이상의 국방예산을 첨단 군사무기·장비 구입 및 개발을 위해 지출할 것이다.

1997·99년 5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한데 이어 향후 50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는 대신, ‘고기술 조건하의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 무기장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²³⁾ 해·공군력 강화는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22) 金泰虎, “中國의 第16次 黨大會: 新指導部 人事內容과 含意,” 『新亞細亞』, 제10권 제1호(2003년 봄), p. 32.

23) 2003년 군사예산 증가분은 주로 공군, 해군, 제2포병부대, 탄도미사일부대를 현대화하는 데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있다.

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단기간 내에 후세인을 축출하였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군사 현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승진한 탕자쉬엔이 3월 6일 내외신 기자회견 시 중국의 대외정책 원칙을 ‘剛中有柔, 柔中有剛, 剛柔并濟’라고 천명하였는 바,²⁴⁾ 중국은 ‘독립자주적 평화외교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16차 당대회와 10기 전인대를 계기로 중국 지도부의 권력분산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대외정책이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서 이성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국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의 신 지도부는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3. 대미정책

1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진출한 탕자쉬엔과 외교부 부부장으로 이동한 다이빙궈(戴炳國)를 제외한 외교담당 관료들이 미국통이었으며, 이번 10기 전인대에서 주미 대사를 역임한 리자오싱(李肇星)이 외교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대미관계가 최우선시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이(吳儀), 리자오싱, 양계츠(楊潔篪) 등 미국통이 중앙위원회에 진출하였고, 1990년대말 대미 무역협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였던 우이는 부총리로 승진하였다.

당분간 장쩌민이 중앙외사영도소조 조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국의 대미정책 결정과정에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니, 우이 부총리와 리자오싱 외교부장 등 미국통이 대미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중국의 대미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²⁵⁾ 중국은 강대국의 패권정책에 반대하고 대만문제

24) “中國外交,剛柔并濟,”『人民日報』, 2003. 3. 6.

25) 전임 외교담당 부총리 첸치천과 전임 외교부장 탕자쉬엔은 러시아와 일본 전문가였다.

와 인권문제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이나, 미국과의 실제 협상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핵심 외교정책 실무자들이 미국을 잘 아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중미간 외교협상에서 타협을 이루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아프간전쟁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라크전을 통해 중동지역 이권을 장악하는 등 세계 패권을 추구하고 대중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全面的 小康社會’ 실현을 위해 9·11 사태이후의 중·미관계 개선 추세를 지속시키려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 등장 이후 중·미관계는 2001년 4월 군용기 충돌사건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첨단 군사무기 판매 결정 및 동년 5월 대만 총통의 미국 통과방문 허용 등으로 인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되었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대테러전을 적극 지지하고 9.11 테러 직후 부시 미국 대통령이 상하이 아태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건설적 협력상대’라고 지칭함으로써, 중·미관계가 호전되어 왔다. 중국은 이러한 중·미관계 개선 추세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비난하고 유엔 체제 내에서 이라크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천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제재 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와 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던 반면에, 중국은 기권 가능성을 밝힘으로써 미국의 행동에 정면 반대하지는 않았다.²⁶⁾

후진타오-원자바오 신 지도부는 집권 초기에 대만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에 대해 첨단 군사무기 판매를 확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당초 4월로 예정되었던 체니 미 부통령 방중시 중국은 미국에게 ‘하나의 중국’원칙 지지와 대만독립 불지지 입장을 천명하도록 요구할 방침이

26) Gandy A. Epstein, “Beijing limits role in world’s hot spots,” *The Baltimore Sun* (March 11, 2003); “Iraq a big test of Sino-U.S. ties,” *Korea Herald*, March 13, 2003.

었다.²⁷⁾

미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극히 중요하므로, 중국은 대미 경제교류 협력 확대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2002년 중국은 미국에 1,251억 달러를 수출하여 1,03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 역조국이 되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대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중국경제에 사활적인 상대이다 서부대개발 추진에 필요한 방대한 자본 조달을 위해서도 미국과 경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V.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

1. 우호협력관계 유지

2002년 8월 이래 중국과 북한관계가 눈에 띄게 소원해졌으나, 중국의 신지도부는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북한과 선린우호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것이다. 최근 중국 외교부의 콩취엔(孔浬) 대변인은 중·북 관계를 선린우호관계로 규정하고, 한·중관계를 협력동반자관계로 지칭하였다.²⁸⁾ 경제분야를 비롯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게 한국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는 1,000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접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게 적대적인 강대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경우 중국에게 미칠 심각한 안보위협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안보전략가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중요한 협력상대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한·중 수교 10주년

27) 그러나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전이 예상보다 장기화 되자 중국 등 동아시아 방 문계획을 취소하였다.

28) 최근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동반자관계가 갖는 중요성이 우호관계가 갖는 의미 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孔浬就朝鮮中開核反應堆,兩會安全措施等問答,” <http://www.chinanews.com.cn/2003-02-27/26/276924.html>(검색일: 2003. 2. 28)

기념일 바로 전날이었던 2002년 8월 2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한·중관계 발전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고려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북한은 러시아와 에너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고,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002년 9월 김정일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였을 때 중국채널을 통하지 않고 러시아채널을 활용하였다는 점도 중국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더구나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은 중국에게 사전 협의와 사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년 9월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네덜란드 국적의 중국계 기업인 양빈(楊斌)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도 북한은 중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²⁹⁾ 중국 외교부 고위관리에 의하면,³⁰⁾ 중국이 북한에게 양빈을 특구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특구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결국 중국은 양빈을 세금 탈루, 부동산 불법개발 및 반체제활동 연루 등의 혐의를 내세워 구금하여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 실현을 어렵게 하였다.

중국 16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개편된 후 김정일은 중국 최고 지도부와 인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방문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2002년 11월 15일 장쩌민과 후진타오에게 당 중앙군사위 주석과 당 총서기 취임을 축하하는 전보만을 보냈을 따름이었다. 또한 김정일은 2003년 2월 12일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만 방문하고 중국대사관은 방문하지 않았다. 서울에 나와 있는 중국 언론인에 의하면, 당시 김정일이 중국대사관에도 방문의사를 밝혔으나 중국측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29) 2002년 10월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노력과 성과를 중국에 통보하였다. 이는 북한이 그 이전까지 중국에 대해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개선 상황과 신의주 특구문제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 베이징에서 필자와의 인터뷰, 2002. 10. 21.

의 방문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³¹⁾

이처럼 최근 중·북간 협력관계에 균열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과 한·미, 일과의 외교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군사동맹을 통한 안보가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예방외교와 신뢰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협력안보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1년 북한과 체결한 군사동맹조약을 형식적으로나마 계속 유지할 것이다. 현재 중국이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라는 사실은 중·북관계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도발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자동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아직도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에게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저지하도록 하고, 북한에게는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북 군사동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돕기 위해서라기 보다 한반도에서 무력분쟁 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유지적 기능을 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붕괴에 따른 혼란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식량과 원유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강화해 왔는데, 중국은 1995년 식량 10만톤, 1996년 식량 10만톤, 1997년 식량 15만톤, 1998년 식량 10만톤과 비료 2만톤 및 원유 8만톤, 1999년 식량 15만톤과 코크스 40만톤, 2001년 식량 20만톤을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공개하였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국은 북한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에도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³²⁾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는데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에게 외부세계가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채택하게 될 경우 북한 사

31) 서울에서 필자와의 인터뷰, 2003. 4. 5.

32) <http://www.chinanews.com.cn/2002-12-13/26/252999.html>(검색일: 2002. 12. 13)

회주의체제가 존속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탈북자문제를 대외적으로는 중국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고려하여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실지로 연길 등 중국 동북삼성지역의 경우 상당부분의 강력사건이 탈북자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1986년 8월 북한과 체결한 「변경지역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4조에 의거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내 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대부분을 탈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도 북한에게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5년간 중국을 지배할 최고 지도부가 확정되어 중국과 북한은 조만간 최근 경색된 관계를 해소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각종 레벨의 접촉과 협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원유의 절대량을 공급해 주는 등 북한정권 유지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은 북한에 57만 1,700톤의 식량과 57만 9,300톤의 원유를 제공하였으며, 2002년에는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32만 6,300톤의 식량과 47만 2,000톤의 원유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³³⁾

2.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장 견지

중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 핵개발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에게 대북 압박정책 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주문해 왔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데 부정적인 입

33) 관세관, “2002년 중국-북한 교역동향,” <http://www.koreaemb.org.cn>(게시일: 2003. 1. 29)

장이며, 북한에게 핵무기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대북 군사 경제적 압력행사를 저지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악화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주도권 유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및 북한정권 붕괴 유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³⁴⁾ 중국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정책에는 적극 지지함으로써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악화되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을 장기화하고 북한을 고사시키려는 것은 지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의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중국 자신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과 압박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³⁵⁾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등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³⁶⁾ 200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상정한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이관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가 기권한 반면 중국은 찬성하였는데,³⁷⁾ 이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

34) 時永明, “朝鮮核問題何去何從,” 『中國評論』, 2003年 3月號 (2003.3), pp. 62-62; “劉建超就朝鮮核力量, 北京會談和印巴局勢問答,” <http://chinanews.com.cn/n/2003-04-29/26/298867.html>; “中國軍科院軍事專家談朝鮮半島局勢,” “<http://neonle.com.cn/GB/iunshi/62/20030306/937346.html> ; 신상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월간중앙』, 2003년 2월호 (2003. 2), pp. 308-312 등 참조.

35) 1월 10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직후 장쩌민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36) 時殷泓, “朝鮮核危機與中國的至高戰略利益,” 『中國評論』, 2003年 2月號, pp. 14-18.

37) 『중앙일보』, 2003. 2. 13.

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북한 핵문제 해법과 관련, 중국은 북·미가 직접 당사자라면 북·미 양자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절충하는 형태의 다자대화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 3월 10일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장쩌민 주석이 “회담의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이 주장한 다자대화의 형식을 북한에게 수용하도록 권유하였다.³⁸⁾ 북한의 반대를 이유로 미국이 주장한 다자대화 방식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북핵 위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대화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중국은 북핵 위기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중재함으로써 한반도 위기상황 해소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가 북핵 논의를 위한 다자대화에 참여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³⁹⁾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발언권 확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북한이 코너에 몰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회담 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도 미국 한나라만을 설득하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라크문제 보다 북한 핵문제에 따른 위협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 이라크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는 대신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38) “江澤民與布什通電話,” <http://www.peopledaily.com.cn/GB/shizheng/16/20030311/940694.html>(검색일:2003.3.11)

39)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등 유관국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직접 관련국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王莉, “人民觀察: 朝核會談令人歡迎的好開端,” 『人民日報』, 2003. 4. 28.

해결하도록 미국에 요구하였다. 이라크전 직전인 3월 10일 장쩌민 주석과 부시 미 대통령 간 전화통화에서 부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중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대신 이라크전에 대한 중국의 반대입장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관련국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물리적 행사에도 반대하지만, 북한에게도 폐연료봉 채처리와 장거리 미사일발사와 같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⁴⁰⁾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북한과 다각적으로 접촉하여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였다. 탕자쉬엔 외교부장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북한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2002. 12. 27)하였으며,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베이징 공항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북한 핵문제를 논의(2. 18)하는 한편, 3월초에는 첸치천 외교담당 부총리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에게 다자회담 수용과 김정일의 방중을 촉구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확보되어야 하나, 2002년 8월 이후 중·북관계가 악화되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를 강력하게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2월 27일 탕자쉬엔 외교부장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최진수 대사에게 핵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를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12월 29일 “다른 나라들이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안전 담보를 주고 대화에 나서도록 요구하거나 그렇게 못하겠으면 가만있으면 되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중재역할 수행 요청을 거부하였다.⁴¹⁾

이에 반해 1994년 북한 핵 위기 시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지지아래

40) 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월 20일 북한에게 핵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촉구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로동신문』, 2002. 12. 30.

장쩌민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된 상황이었으나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로의 권력 이양기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신 지도부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 맺는 말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당대회와 전인대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중국의 신지도부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의 일반 주의를 반대하면서도 대내 경제발전과 평화적 대외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유지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미관계 개선을 최우선 시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후진타오 지도부 초창기에 대만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만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도록 하면서 대만과의 교류·협력정책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21세기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이관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을 중국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간주하여 북한체제의 동요나 북한의 붕괴를 초래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강되고 있고, 아시아에서 정치적 발언권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과 홍콩을 포함할 경우,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하여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로 부상하였다. 젊은 세대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을 호의적으로 보는 비율이 훨씬 높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동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 및 경제번영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장쩌민이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이므로 장쩌민 등 기존 중국의 지도부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후진타오, 원자바오, 쟁칭홍 등 중국의 신 지도부와의 교류·접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중앙정치국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장더장(張德江)이 대북정책 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바, 정치국원 겸 광둥성 서기로 있는 장더장과의 접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청단 출신으로 후진타오와 가깝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에 유임된 리더주(李德洙)에 대해서도 접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후진타오 지도부 하에서 중국이 외교안보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등 외교안보부서 실무진과 정부 유관 연구기관 전문가와의 교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중국이 크게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에 대항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미국이 갖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셋째, 중·북관계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북관계의 발전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1994년 중·북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되었을 때,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과거 냉전시처럼 중·북관계 개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지도부 접촉 시 이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21세기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 시켜야 한다. 그동안 대북관계에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문제, 달라이 라마 방한문제 및 중국 내 탈북자문제 등에 있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해 왔으나 대중관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참여정부」 하에서 시민단체들이 중국에 대한 저자세외교를 타파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